

특별기고

농민의 눈물을 국가는 외면하면 안 된다

정성욱

목포농협 융해지점장



최근 농업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농가들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시설채소인 시금치와 열무 열갈이배추 같은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조차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은 수확을 하고도 웃음을 잃었다.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된 시금치 한 단 가격이 500~6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열무 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25% 이상 떨어졌다. 농민들은 “포장비와 운송비를 제하면 손에 남는 것이 없다”며 “팔수록 손해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어려움은 시설채소 농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지채소 농가 역시 깊은 시름 속에 놓여 있다. 배추와 무, 양파, 대파, 감자 등 노지에서 재배되는 주요 채소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가격 폭락과 기후위험 속에서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에는 폭우와 이상고온으로 생산량이 줄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올해는 소비 부진과 출하량 증가가 겹치며 가격이 급락했다.

특히 노지채소는 기후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한 번에도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렵게 키운 작물을 제값도 받지 못한 채 밭에서 갈아엎어야 하는 현실은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이란 전쟁을 비롯한 중동 경제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농업 전반의 생산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비료와 농약, 농기계 부품, 시설 자재 가격은 물론이고 면세 유와 운송비까지 크게 올랐다. 시설채소 농가는 난방비와

물류비 부담에 신음하고, 노지채소 농가는 농기계 운용비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데 생산비는 치솟는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지채소 농민들은 저장성과 출하시기 문제로 더욱 절박한 현실에 놓여 있다. 수확 시기를 놓치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출하가 한꺼번에 몰리면 가격은 바닥까지 추락한다. 농사를 지을수록 빚만 늘어남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농민 개인의 어려움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농업이 무너지면 국민의 먹거리 안전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후위기가 반복되고 있는 지금 식량은 더 이상 단란 있으면 언제든 지킬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코로나19와 국제분쟁을 거치며 우리는 이미 공급망 붕괴의 위험을 경험했다. 국내 농업 기반마저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늘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버텨왔다.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물가 안정을 이유로 수입 확대와 가격 억제 정책이 즉각 시행되지만, 가격이 폭락할 때는 고스란히 농민들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풍년이 들어도 격정이고 흉년이 들어도 격정인 산업 그것이 바로 지금의 농업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농업을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농업은 국가안보이며 생존의 문제다. 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삶의 터전이자 뿌리이기 때문이다. 농민 한 사람의 땀방울이 결국 국민 모두의 하루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임시방편식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시설채소와 노지채소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소 생산비를 보장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격안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폭락할 경우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농자재 유통비 지원 확대도 시급하다. 면세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농자금 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해 농민들이 최소한의 영농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용 비료와 시설 자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농업 정책 전환도 절실하다. 재해보상체계를 강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급식 확대와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촌의 불빛이 꺼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함께 어두워진다. 지금 농민들이 흘리는 눈물은 단지 한 직업군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먹는 한 끼 식사는 누군가의 새벽과 밤 그리고 묵묵한 희생 위에 놓여 있다.

오늘도 묵묵히 씨앗을 뿌리는 농민들이 있다. 가격 폭락 속에서도 치솟는 기름값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국가가 손을 잡아줘야 한다. 농민이 살아야 농촌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을 지키는 일은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면이 아니라 연대이며 무관심이 아니라 책임이다. 농민들이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촌 그리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다.

기고

버려지는 종이팩을 구하는 아이들

김지현

한걸음가게 대표,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종이팩은 종이만 아니다. 종이팩 자원순환에 관심을 가져본 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문장이다. 종이팩은 우유 주스와 같은 액체류를 담는 포장재다. 내용물이 새겨진 변질되지 않도록 원지 안쪽에 폴리에틸렌 필름이 코팅된 복합소재로, 재활용하려면 별도의 공정을 통해 필름과 비닐을 분리해야 비로소 화장지나 백판지로 되살아날 수 있다. 종이도 플라스틱도 아닌 ‘종이팩’ 그 자체로 분리 배출돼야만 가치를 되찾는 소재인 것이다.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소재임에도 종이팩의 재활용률은 바닥을 친다. 2024년 기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포장재의 평균 재활용 실적이 88%에 달하는 반면, 종이팩은 겨우 14%에 그쳤다. 금속캔, 유리병, 페트병의 재활용률이 모두 7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포장재 업계의 애물단지나 다름없었다. 구조적으로 분리배출이 어렵고 일반 종이류와 섞여 버려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동네 카페를 돌며 종이팩을 모아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져다주고 수거함 운영 실태를 조사하며, 구체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마침내 그 끈질긴 실천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움직였다. 올해 초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을 별도 수거 품목으로 지정하는 분리수거 지침 개정 계획이 발표됐다. 위에서 내려온 정책이 아닌 시민들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실천이 끌어낸 변화다.

공동주택에 변화가 자리 잡는 지금, 우리는 또 다른 거점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학교다. 급식 우유팩은 물론 가정에서 씻고 말려서 가져온 주스팩, 두유팩까지 모을 수 있다면 학교는 가정과 자원순환 시스템을 잇는 연결 고리가 된다. 수백명이 매일 오가는 공간이 지역 자원 순환의 살아있는 거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고민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

“종이팩을 모아도 배출할 곳이 없어요”,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기엔 양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게 정말 재활용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은 교육대로, 수거는 수거대로, 배출은 또 따로 움직였다.

아무리 열정 있는 학교라도 구조가 없으면 결국 멈추게 된다. 광주에서 시작된 ‘종이팩을 구하는 우리 학교’ 프로젝트는 바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만들어가고 있다.

2023년 문산초등학교 1개교에서 출발해 2026년 현재 특수학교인 선예학교·광주선명학교를 포함해 총 14개 학교가 함께하고 있으며, 4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종이팩 자원순환 교육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네 가지다. 첫째, 인식과 실천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자원순환 교육을 정례화한다. 둘째, 교내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

해 자원순환 활동을 가시화한다. 셋째,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주 1~2회 정기 수거 루틴을 만들고 학생이 주체가 돼 캠페인을 운영한다. 넷째, 일정량이 되면 수거업체가 학교로 직접 방문해 수거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원의 순환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한 환경 교육을 넘어 자원이 실제로 어떻게 돌고 돌아 오는지를 몸으로 배우는 경험이다.

6월5일은 환경의 날이다. 매년 이날이 되면 수많은 기념행사와 선언이 쏟아지지만 진정한 환경의 날의 가치는 일상의 표준을 바꾸는 구조적 실천에 있다. 학교가 자원순환의 실질적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교 구성원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가 학교를 공식 수거 거점으로 인정하고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교육청과 시민사회가 함께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설계해야 한다.

어느 마을 장터에서 종이팩을 들고 캠페인 부스로 다가온 아이가 말했다. “종이팩이 불쌍해요” 쓰레기가 아닌 구해줘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그 감수성이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됐다. 초등학교 시절 종이팩을 씻어 학교에 가져오고 캠페인을 운영하고 수거업체에 직접 넘겨본 경험은 졸업 이후에도 오래 남는다. 자원순환의 감각을 몸에 익힌 아이들이 마을의 변화 주체가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변화가 시작되는 지금, 학교는 그 변화의 가장 작고 가장 단단한 거점이 될 수 있다. 그 흐름 위에 ‘종이팩을 구하는 우리 학교’가 있다.

위치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분회회장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두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한 차례 부딪히기도 했다.

더 큰 걱정은 물리적 결합도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할 원구성이다. 초대 통합의회 의장이라는 상징적 자리를 두고 ‘광주 대 전남’의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은 매우 짙다.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 부의장 구성과 12개 안팎으로 예상되는 상임위원회 배분 역시 도미노처럼 지연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양 시·도의회가 개원을 앞두고 당선인 간담회와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진정한 화학적 결합은 결국 의원 당선자들의 손에 달렸다.

320만 시·도민이 바라는 것은 지역 갈등이 아니다. 첫 단추를 끼우는 초대 의원들이 통 큰 양보와 협치를 발휘할 때 초광역 행정의 진정한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사설

광주·전남 사전투표율 전국 최고 그 이유는

6·3지방선거 광주·전남 사전 투표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마감 결과 전남이 38.95%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광주는 27.83%로 전국 3위를 보였다. 이들 모두 전국 평균 23.51%를 크게 웃돌았다.

광주는 2022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17.28%보다 무려 10.55%p, 2018년 지방선거 23.65%보다 4.18%p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가 32.19%로 가장 높았고 남구 29.70%, 북구 28.68%, 서구 27.82%, 광산구 24.64% 순이었다.

전남도 2022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31.04%보다 7.91%p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신안군이 61.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진도군(55.03%), 함평군(54.21%), 강진군(52.16%), 담양군(51.89%), 장흥군(50.71%), 구례군(50.44%), 곡성군(50.34%) 등 8개 군의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어섰다.

반면, 목포시 33.55%, 여수시 29.65%, 순천시 33.05%, 광양시 33.05% 등 도시권 사전투표율은 전남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당초 광주·전남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80명이 무더기 무투표 당선되고 ‘더불어 민주당 텃밭’이라는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사전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유권자들이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는 무소속 후보간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핵심 지지층을 결집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사전투표율 50%를 넘었던 전남 군들은 대부분 지역 기반이 강한 후보 간 대결 등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이었다.

민주주의 체제의 건강성과 정당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인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유권자들이 정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선출된 권력에 주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첫 출범하는 통합 특별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번 사전선거 열기가 분투표로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사업 전국화하는데...

정부가 응급실 환자 수용 거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지역사회 중심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성과를 냈다고 한다.

광주·전남, 그리고 전북에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이를 시행해 왔는데 중증환자의 사망이 줄고 환자수용도 늘어나는 등 나름 의미있는 결과물을 도출한 것이다.

이 시범사업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이들 권역에서 발생한 프리-케이타스(pre-KTAS) 1등급 중증환자 사망 사례는 일평균 6.6명으로 이는 지난해 평균(7.6명)보다 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여수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 중증외상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1차 처치 후 충남 천안 소재 최중치료 병원 신속 이송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또 같은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수용한 1~2등급 중증환자는 하루 평균 46.8명으로 작년 35.6명보다 31.5%(11.2명) 증가했다.

여기서 프리-케이타스(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는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기 전(현장 또는 구급차 안)에 환자의 상태를 평가해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중증의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결정하고 경증은 119구급대가 책임지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런 성과 등을 토대로 7월까지 이 사업에 대한 지침을 정비한 뒤 9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지였던 호남지역은 지난 3개월의 성과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심마을 등 의료 취약지 다수 분포, 대학병원 등 광주 의료자원의 준도가 높은 점 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수처리 드러난 결실과 달리 응급의료 일선 현장에서는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등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며 상당히 박한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이 사업을 전국화해 나가길 바란다.

취재수첩

320만 초광역 행정, 통합시의회에 달렸다

이산하

정치부 차장



오는 7월1일 인구 320만명의 초광역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빛을 올린다. 메가시티의 탄생을 두고 지역 안팎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화려한 청사진의 성패를 가를 진짜 열쇠는 따로 있다.

거대해진 집행부를 감시하고 이끌어갈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회의’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는 점이

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이를 견제하고 조정할 의회의 원활한 작동 없이는 출범과 동시에 결凍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6·3 지방선거 직후 여정을 시작한 통합의회의 서두가 온통 압초투성이라는 점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광주 28명, 전남 63명 등 총 91명의 광역의원이 통합의회에 입성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나 경기도의회에 버금가는 거대 의회가 탄생하는 셈이지만, 정작 내부를 들여다보면 물리적·정치적 결합은 고차 결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물리적 한계부터가 소통의 걸림돌이다. 늘어난 의원 정수를 수용할 주청사와 분회회장의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산업부 370-7010, 사회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진부 370-705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알간3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